Journal of Political Criticism 5 (2009. 11), 47-81

논 문

세종시 논란과 의리지변(義利之辨)

신 동 준*

I. 서 론

'세종특별자치시(약칭 세종시)' 문제로 여권이 심각한 내홍 양상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와 총리실을 주축으로 한 소위 '친이계'는 백년대계 차원에서 세종시를 행정도시 대신 첨단과학도시 등 자족도시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박근혜 전 대표를 비롯한 '친박계'는 대선공약으로 약속한 만큼 대국민신뢰 차원에서 이를 존중해야 하고, 원안추진이 오히려 국토의 고른 균형발전이라는 백년대계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과연 어느 쪽이 옳은 것일까.

먼저 내홍의 배경을 간략히 살필 필요가 있다. 당초 참여정부는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통과를 계기로 소위 '천도계획'을 실천에 옮기고자 했으나 이내 위헌판결을 받게 되자 편법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약칭 세종시법)'을 통과시켰다. 당시 제1야당을 이끌던 박 전 대표는 서울시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법' 통과에 일조한 바 있다. '신의와 원칙'을 자신의 정치적 자산으로 삼고 있는 박 전 대표가 원안추진을

* 21세기 정경연구소장

고집하는 것은 나름대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사실 올해 들어와 세종시 문제가 문득 정국현안으로 부상한 데에는 이 대통령의 책임도 작지 않다. 그는 대선 당시 충청권 유권자에게 원안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원론적인 면에서 볼 때 정운찬 신임 총리를 내세워 원안수정을 추진하는 것은 면목 없는 일이다. 그러나 야권 및 친박계가 '대국민신의' 운운하며 원안추진을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다.

과거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도 '내각제개헌'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다가 집권 이후 이내 폐기한 바 있다. 그 이전의 노태우정부도 소위 '중간평가'를 대국민 공약으로 내세웠다가 이후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 이를 무효화시켰다. 당시 이들은 모두 정국상황이 일변했다는 상황논리를 내세웠다. 공약의 내용 및 성격 등을 감안할 때 사실 이들이 더 큰 비난을 받아야만 했다. 그럼에도 오직 충청지역 유권자만을 대상으로 식언을 현 정부만이 유독 비난의 표적이 된 형국이다.

사상사적으로 볼 때 세종시 논란은 선진시대 때 제기된 소위 '신식지변(信食之辨)' 내지 '의리지변(義利之辨)'의 잣대를 동원하면 쉽게 그 해법을 찾아낼 수 있다. '신식지변'은 백성들의 관점에서 치평(治平)을 논한 것이다. 과연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먹고 사는 문제인 '민식(民食)'과 위정자에 대한 신뢰인 '민신(民信)'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둘러싼 논변을 말한다. '의리지변'은 위정자의 관점에서 치평을 논한 것이다. 과연 위정자의 입장에서 볼 때 백성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신의(信義)'와 국가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뜻하는 '국리(國利)'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둘러싼 논변을 말한다. 세종시 논란에서 친박계는 '민신'과 '의리', 친이계는 '민식'과 '국리'에 무게를 둔 셈이다.

II. 논란의 사상사적 의미

1. 존망과 신식지변(信食之辨)

고금동서를 막론하고 백성들이 먹고사는 문제인 소위 '민식'에 실패하고도 통치에 성공한 적은 없다. 실제로 '민식'의 실패는 어김없이 민란으로 표출돼 끝내 왕조교체로 이어졌다. 역사를 개관할 때 성군으로 일컬어진 인물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은 '민식'이 그만큼 어려운 과제였음을 반증한다. 동양에서 이런 사실을 가장 먼저 통찰한 인물이 바로 춘추시대 전기에 활약한 관중(管仲)이었다. 그는 '민식'을 정치의 요체로 간주해 '부민부국(富民富國)' 을 역설한 최초의 인물에 해당한다. 공자보다 1세기 반 정도 앞선 기원전 7세기에 활약한 관중은 강력한 부국강병을 강력 추진해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던 제나라를 마침내 천하제일의 강대국으로 만든 위대한 정치가였다. 제갈량과 함께 소위 '관제(管諸)'로 불리며 중국의 2대 재상으로 칭송받고 있는 게 그 증거이다. 당시 그가 가장 역점을 둔 것이 바로 '민식'이었다. 『관자』[목민]편의 해당 구절이다.[1)]

"창름(倉廩)이 가득 차야 예절을 알게 되고, 의식(衣食)이 족해야 영욕을 알게 된다."

그는 <실창름(倉廩實)·족의식(足衣食) → 지례(知禮)·지영욕(知榮辱)>의 도식을 제시한 것이다. 여기의 '실창름'은 재정의 안정, '족의식'은 민생의 안정을 뜻한다. '실창름'과 '족의식'은 '부민부국'으로 요약할 수 있다. '지례'와 '지영욕'은 구체적으로 예의염치(禮義廉恥)를 말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관자』[목민]편의 해당대목이다.[2)]

---

1) 『관자』[목민], "倉廩實則知禮節, 衣食足則知榮辱,"

2) 『관자』[목민], "國有四維, 一維絶則傾, 二維絶則危, 三維絶則覆, 四維絶則滅.....何謂四維. 一曰禮, 二曰義, 三曰廉, 四曰恥."

"나라에 4유(四維)가 있다. 그 중 한 가지가 끊어지면 나라가 기울고, 두 가지가 끊어지면 나라가 위태로워지고, 세 가지가 끊어지면 나라가 뒤집어지고, 네 가지가 모두 끊어지면 멸망한다. 무엇을 4유라고 하는가. 첫째 '예', 둘째 '의', 셋째 '염', 넷째 '치'이다."

관중은 이 대목에서 '사유'의 존부(存否)를 국가의 '쇠망'을 뜻하는 경위복절(傾危覆絶)과 연결시켜 논했다. 두 대목을 종합하면 결국 그는 <실창름·족의식 → 지례·지영욕 → 사유립(四維立) → 국존(國存)>의 도식을 제시한 셈이다. '실창름·족의식'을 '족식(足食)', '지례·지영욕'을 '지례(知禮)'로 단순화하면 <족식 → 지례 → 사유립 → 국존>이 된다. 이를 뒤집어 해석하면 <부족식(不足食) → 부지례(不知禮) → 사유절(四維絶) → 국멸(國滅)>의 도식이 성립된다. 그는 [목민]편의 맨 앞 대목에서 국가존망의 순위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셈이다.

이는 공자가 『논어』[안연]편에서 정치의 요체를 묻는 자공의 질문에 <족식 → 민유신(民有信) → 국립(國立)>의 도식을 제시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3] 이에 따르면 하루는 자공이 공자에게 정치에 관해 묻자 공자가 이같이 대답했다.

"족식(足食)·족병(足兵)이 선행되면 민신(民信)이 이뤄질 것이다."

자공이 다시 물었다.

"만일 부득이하여 반드시 하나를 버리기로 한다면 세 가지 중에서 무엇을 먼저 버려야 합니까."

"거병(去兵)이다."

자공이 재차 물었다.

"만일 부득이하여 반드시 하나를 버리기로 한다면 나머지 두 가지 중 무엇

3) 『논어』[안연], "子貢問政. 子曰, '足食·足兵, 民信之矣.' 子貢曰, '必不得已而去, 於斯三者何先.' 曰, '去兵.' 子貢曰, '必不得已而去, 於斯二者何先.' 曰, '去食. 自古皆有死, 民無信不立.'"

을 먼저 버려야 합니까."

"거식(去食)이다. 자고로 먹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으나 사람은 누구나 죽기 마련이다. 그러나 '민신'이 없으면 나라가 설 수조차 없게 된다."

자공의 첫 번째 질문은 국가 존립조건의 순위를 물은 것이다. 이때 공자는 <족식 → 족병 → 민유신(民有信) → 국립(國立)>의 도식을 제시했다. 이는 관중의 <족식 → 지례 → 사유립 → 국존> 도식과 취지를 같이 하는 것이다.

문제는 자공의 두 번째 질문이다. 『논어』의 내용 중 이 대목만큼 세인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킨 대목도 많지 않다. 두 번째 질문은 국가가 내란 및 외침 등의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위정자가 취해야 할 정책의 우선순위를 물은 것이다. 자공이 '부득이'라고 전제한 것이 그 증거이다. 이에 대한 공자의 대답은 '거병'과 '거식'으로 나타났다. '거병'과 '거식'은 '족병'과 '족식'이 충족되지 못하는 소위 '부족병' 및 '부족식'의 상황을 의미한다.

당시는 성을 포위해 공격하는 공성전(攻城戰)이 횡행했다. 도성이 포위되어 성 안의 식량이 다하면 결국은 항복을 선언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마지막 순간까지 위정자와 백성이 하나가 되어 끝까지 저항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사기』[초세가]에 이를 뒷받침하는 일화가 나온다.[4]

초장왕 20년(기원전 594), 초나라가 송나라의 도성을 포위한 후 성하지맹(城下之盟)을 요구하자 송나라는 오히려 초나라 사신을 살해했다. 송나라의 도성을 포위한지 5달이 지났다. 도성 안의 식량이 다 떨어지게 되자 송나라 백성들은 '역자이식(易子而食: 서로 자식을 바꿔 잡아먹음)'과 '석골이취(析骨而炊: 해골을 쪼개 땔감으로 만들어 밥을 지어먹음)'로 저항했다. 마지막 순간에 송나라 대부 화원이 성 밖으로 나와 도성 안의 사정을 고하며 자신들의 각오를 밝히자 초장왕이 감탄했다.

"과연 군자로다."

---

4) 『사기』[초세가], "楚莊王二十年, 圍宋, 以殺楚使也. 圍宋五月, 城中食盡, 易子而食, 析骨而炊. 宋華元出告以情. 莊王曰, '君子哉.' 遂罷兵去."

초나라 군사가 이내 파병하여 물러갔다. 이 일화는 당시 송나라가 '민신'을 통해 패망의 위기를 넘긴 정황을 묘사해 놓은 것이다. 『춘추좌전』[노선공 15년]조는 당시의 상황을 보다 상세히 전하면서 '민신'이 발휘케 된 배경을 '역자이식(易子而食), 석해이찬(析骸以爨)'으로 묘사해 놓았다.[5] 춘추전국시대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매우 많았다.

[안연]편에서 '부득이'한 상황을 전제로 한 자공의 질문에 공자가 '거병'과 '거식' 및 '민신'을 차례로 언급한 것은 바로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서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공자가 가장 먼저 '거병'을 언급한 것은 위기상황을 이유로 민량(民糧)을 군량(軍糧)으로 빼돌려 백성을 기아에 빠뜨리는 등의 일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충고한 것이다. '거병'을 행하지 않으면 민심이반이 일어날 소지가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둔 지적이다.

뒤이어 '거식'을 언급한 것은 위기가 심화돼 군량은 물론 민량조차 부족하게 된 상황을 언급한 것이다. 백성들이 기아의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위정자가 자신 및 일족만을 챙기는 등의 사사로운 짓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마지막으로 '민신'을 언급한 것은 '거병'과 '거식'을 행하였음에도 더욱 위기가 심화돼 패망의 일보직전에 몰렸을 때 위정자가 취해야 할 최후의 구망(救亡) 수단이 '민신'에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식량이 모두 떨어진 상황에서 백성들이 '역자이식, 석해이찬'을 감행하며 끝까지 저항할 수 있는 것은 위정자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된 것이다. 공자가 맨 마지막 구절에서 <민유신 →국립>의 도식을 역설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자공과 공자의 두 번째 문답은 나라가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의 대처방안을 논한 것으로 결코 국가 패망조건의 순위를 논한 게 아니다. 그럼에도 주희를 비롯한 성리학자들은 이를 국가 패망조건의 순위를 언급한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공자가 '민신'을 국가존망의 알파오메가로 이해

5) 『춘추좌전』[노선공 15년], "使華元夜入楚師, 登子反之牀. 起之曰 '寡君使元以病告, 曰, 敝邑易子而食, 析骸以爨. 雖然, 城下之盟, 有以國斃, 不能從也. 去我30里, 唯命是聽.'"

했다고 풀이했다. 주희의 해석이다.[6]

"신의가 없으면 비록 살더라도 스스로 설 수 없으니 죽어서 편안함만 못하다. 그래서 위정자는 차라리 죽을지언정 백성들에게 신의를 잃어서는 안 되고, 백성들 또한 차라리 죽을지언정 위정자에게 신의를 잃는 일이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위정자는 차라리 죽을지언정 백성들에게 신의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풀이한 것은 백성들의 안위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는 위정자의 기본책무를 망각한 것이다. 나아가 '백성들 또한 차라리 죽을지언정 위정자에게 신의를 잃는 일이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풀이한 것은 정치와 도덕의 영역을 전혀 분간치 못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이는 주희가 '치평'을 개인적 수덕(修德)의 확장으로 간주한 사실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국가존망 차원의 '민신'과 '민식' 문제를 개인차원의 '신의'와 '식음(食飮)' 문제로 축소한 결과이다. 그의 사상적 스승인 정이천의 해석도 별반 다를 게 없다.[7]

"민덕(民德)을 가지고 말하면 본래 '신'은 인간에게 고유한 것이니 '병'과 '식'이 이보다 앞설 수는 없는 것이다."

이는 공자가 말하고자 한 '민신' 및 '민식'의 기본취지를 오해한 것이다.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관중의 '민식'을 공자의 '민신'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간주해 온 배경이 여기에 있다. 문화대혁명 당시 사인방이 관중을 법가의 시조로 간주하며 공자와 정반대의 입장을 취한 것으로 해석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공자가 '민신'을 구망(救亡)의 최후조건으로 내세운 것은 '역자이식, 석해이찬'으로 표현되는 강고한 '민신'만이 절체절명의 패망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

---

6) 『논어집주』, "無信則使生而無以紫笠, 不若死之爲安. 故寧死而不失信於民, 使民亦寧死不失信於我也."

7) 『논어집주』, "程子曰, '以人情而言, 則兵食足而後吾之言, 可以孚於民. 以民德而言, 則信本人之所固有, 非兵食所得而先也."

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고금을 막론하고 국가패망의 위기상황에서 '역자이식, 석해이찬'의 강고한 '민신'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위정자의 솔선수범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이 대목에 대해서는 정이천도 공자의 기본취지에 부합되게 풀이해 놓았다.[8]

"위정자는 응당 솔선하여 백성을 이끌며 나라를 사수(死守)해야 하고, 위급하다는 이유로 백성을 버려서는 안 된다."

결국 공자는 치세와 난세를 막론한 위정자의 솔선수범을 역설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주희는 이 구절 역시 개인적 '신의' 차원에서 해석해 놓은 것이다. 이는 맹자의 사덕설(四德說)에 기초해 '신'은 '인의예지'에 고루 내재한 기본 선성(善性)에 해당한다는 소위 오상설(五常說)을 지지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국가존립의 우선순위와 관련해 <족식 → 족병 → 민유신 → 국립>의 도식을 제시한 공자 역시 관중과 마찬가지로 <부족식 → 부족병 → 민무신 → 국불립>의 도식을 국가패망의 우선순위로 간주하고 있었다. 다만 그는 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을 뿐이다. 공자와 관중은 '민식'을 통해 궁극적으로 '민신'을 찾고자 한 점에서 하등 차이가 없었던 셈이다. 그럼에도 주희를 비롯한 성리학자들은 자공과 공자의 두 번째 문답이 '부득이'한 위기상황을 전제로 한 대처방안 논의였다는 사실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한 것이다. 이들이 <민무신 → 국불립>의 문면에 얽매여 '민식'이 아닌 '민신'을 국가존망의 요체로 파악하는 우를 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공자와 관중은 기본적으로 치지와 피치자 모두 국가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주지해 국가존망에 대한 이해를 함께 하며 공영을 꾀하라고 권했다. 위정자에게 평시에는 '민식'의 해결에 힘써 '부민부국'을 성취하고, '부득이'하게 패망의 위기에 몰린 때에는 자신 및 일족만을 챙기는 식의 사사로운 행보를 멀리함으로써 '역자이식, 석해이찬'의 강고한 '민신'을 이끌어내라고 주

8) 『논어집주』, "爲政者當身率其民, 而以死守之, 不以危急而可寄也."

문한 것이다. 공자가 [헌문]편에서 관중의 패업(霸業)을 높이 평가하며 '인자(仁者)'로 칭송한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다.[9]

역사를 개관하면 '민식'과 '민신'은 상호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으나 그 순위만큼은 어디까지나 <민식 → 민신>의 도식 위에 서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실제로 위정자가 아무리 고상하고 거창한 구호를 내세울지라도 '민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이는 공허한 슬로건에 그칠 수밖에 없고, 백성들 역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예의조차 갖추기가 어렵게 된다. 위정자가 '민식'에 실패하면 백성은 유민(流民)으로 떠돌 수밖에 없게 되고, 이는 곧 외적의 침구(侵寇)를 초래케 된다. 왕조교체 및 외적침공은 예외 없이 이런 도정 위에 등장했다. 관중이 『관자』의 첫머리에서 <부족식 → 부지례 → 사유절 → 국멸>의 도식을 제시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관중의 '일광천하(一匡天下)' 패업을 높이 평가한 공자가 <민식 → 민신 → 국립>의 이치를 몰랐을 리 만무하다.

세종시 논란에서 '민신'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친박계는 성리학자들처럼 국가존망의 출발점을 '민식'이 아닌 '민신'에서 찾고 있는 셈이다. 이는 위정자가 위기상황에서 솔선수범을 보여야만 '민신'을 토대로 난관을 타개해 나갈 수 있다고 주장한 공자의 기본취지와 동떨어진 것이다. [안연]편의 <민무신 → 국불립> 구절에 대한 정밀한 해석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2. 성쇠와 의리지변(義利之辨)

원래 『논어』의 해석에서 '민식'과 '민신'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신식지변'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단지 당나라 때의 은일지사 조유가 『장단경(長短經)』에서 제자백가를 논하는 와중에 "공자도 백성들의 의식(衣食)을 소중히 여겼다"는 식의 해석을 한 게 눈에 띌 뿐이다.[10] 이는 기본

9) 『논어』[헌문], "子曰, '桓公九合諸侯, 不以兵車, 管仲之力也. 如其仁, 如其仁.'"

적으로 관중과 공자 사상의 상호연관성에 대한 천착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사실과 무관치 않다. 성리학의 등장 이후 개인적 수덕을 중시한 주희의 해석이 대종을 이룬 점도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의리지변'은 선진시대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신의'와 '국리'가 충돌할 때마다 계속 거론돼 왔다. 문화대혁명 당시 사인방과 반사인방 사이에 전개된 소위 '유법투쟁사(儒法鬪爭史)' 논쟁이 그 증거이다.[11] 세종시 논란 역시 '의리지변'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당초 국가존망의 출발점이 '민식'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관중은 국가성쇠의 요체도 소위 '이민(利民)'에서 찾았다. '신식지변'에 이어 '의리지변'의 단초를 연 셈이다. 그는 '이민'을 '애민(愛民)' 내지 '친민(親民)'과 같은 뜻으로 새겼다. 『관자』[권수]편의 해당대목이다.[12]

"천하를 도모하는 자는 두터운 사랑과 이익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백성에게 다가가야 한다."

이는 그가 '사유'의 덕목을 치평의 기본방침으로 제시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사실 '사유'는 예의염치에 입각해 인민들을 적극 교화해야 한다는 교민(敎民)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관자』의 내용 중 유가적 특성이 가장 선명히 드러난 대목이다. '이민'을 '애민' 내지 '교민'과 동일한 뜻으로 새긴 점에서 관중의 의리관은 '의'와 '리'를 똑같이 중시하는 소위 '의리병중(義利竝重)'으로 요약할 수 있다.[13]

---

10) 『장단경』[정론], "農家者, 蓋出於農稷之官. 播百穀, 勤耕桑, 以足衣食, 孔子曰, "所重人食."

11) 원래 의(義)라는 글자는 서주시대만 하더라도 위의(威儀)를 뜻하는 글자였으나 춘추시대에 들어서면서 인의를 나타내는 뜻으로 전용되었다. 리(利) 역시 원래는 밭을 간다는 리(犁)의 뜻이었으나 춘추시대에 들어서면서 이익을 뜻하는 의미로 전용되었다. 黃偉合, [從西周到春秋"義利"思想的發展軌迹]『學術月刊』1990-1(1990), 20쪽 참조.

12) 『관자』[권수]. "爲天下者, 厚愛利足以親之."

13) 왕덕민은 관중의 의리관을 '重利不輕義'로 표현하면서 관중은 '리'를 중시하면서도 결코 '의'를 경시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관중의 의리관은 공자의 "君子, 喩於義. 小人, 喩於利."에 비해 훨씬 명확하고도 통합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그의 평가이다.

그러나 관중은 자신의 이런 의리관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적이 없다. 의리에 관한 본격적인 언급은 공자로부터 시작되었다. 공자는 『논어』[이인]편에서 '의'와 '리'의 상호관계를 이같이 풀이해 놓았다.[14]

"군자는 '의'에 밝고, 소인은 '리'에 밝다."

'의리지변'이 군자와 소인을 가르는 잣대로 제시된 셈이다.[15] 이는 그가 같은 [이인]편에서 "군자는 도덕에 관심이 많고, 소인은 땅에 관심이 많다"고 언급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16] 이는 백성들이 생산 활동의 근거인 토지에 관심이 많은 것을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인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공자가 소인의 사리(私利) 추구행위를 배척하지 않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요왈]편에서 가장 효과적인 통치방법을 묻는 자장의 질문에 이같이 답한 바 있다.[17]

"백성들이 이롭게 생각하는 방향으로 이롭게 해주면 된다."

위정자는 '민리'를 당연시하는 것은 물론 이를 적극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공자는 인민들에게 무엇을 먼저 해주어야 하느냐고 묻는 염유의 질문에 대해서도 유사한 답을 제시했다.[18]

"부유하게 해주어야 한다. 그런 연후에 가르칠 수 있다."

王德敏, [管仲的哲學思想]『春秋哲學』(山東, 山東大學出版社, 1988), 127-133쪽 참조.

14) 에임스는 '의리지변'의 출발점이 『논어』[이인]편의 "君子喩於義, 小人喩於利." 구절에 있다고 파악하면서 백성들의 사리 추구 및 이민(利民)에 대한 평가문제가 도가와 법가, 유가의 통치사상을 확연하게 구별 짓는 근본원인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Ames, R. T., *The art of rulership: A Study in Ancient Chinese Political Thought* (Honolulu: Univ. of Hawaii Press, 1983), 155-164 쪽 참조.

15) 펑여우란은 『논어』[이인]편의 "君子喩於義"를 근거로 공자는 '예'보다 '인의'의 덕을 강조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공자가 『논어』에서 보다 강조한 것은 의가 아닌 '예'였다는 점과 공자가 강조한 인의와 맹자가 주창한 인의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펑여우란, 『중국철학사』(정인재 역, 형설출판사, 1995) 71쪽 참조.

16) 『논어』[이인], "君子, 懷德. 小人, 懷土."

17) 『논어』[요왈], "因民之所利而利之."

18) 『논어』[자로], "曰富之. 曰旣富矣, 又何加焉. 曰敎之."

부민(富民)이 이뤄진 뒤에야 교민(敎民)이 가능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공자가 '민리'를 얼마나 중시했는지를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결국 공자는 군자의 사리 추구 행위는 반대했지만 백성들의 사리 추구는 당연시했고, 이런 맥락에서 군자는 '국리'와 '민리'로 표현되는 '공리(公利)'를 적극 추구해야 한다고 역설한 셈이다. 이를 통해 공자 역시 관중과 마찬가지로 '부민부국' 사상을 지니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19]

그러나 그는 더 이상의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전국시대에 들어와 유가를 포함한 제자백가 내에서 이를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었다. 논쟁의 와중에 [헌문]편에 나오는 군자의 '견리사의(見利思義)' 자세 등이 그의 '부민부국' 사상을 왜곡하는 논거로 이용되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공자의 사상적 후계자를 자처한 맹자이다. 그는 '견리사의'를 근거로 '의'와 '리'는 상호 대립되고, '민리'를 제외한 일체의 '리'는 '의'에 배치되는 '불의'에 불과하다는 식의 주장을 펼쳤다. 『맹자』[양혜왕 상]편 첫 대목에서 양나라의 '국리'를 거론한 양혜왕을 질타한 대목이 그 증거이다.[20]

"왕은 하필 '리'를 말하는가. 오직 '인'과 '의'가 있을 뿐이다."

이는 그가 성선설을 전개하며 이욕(利欲)이 인간의 선성(善性)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주장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군자는 '의'에 밝다고 하면서도 '리' 자체를 나쁘다고 말한 적이 없는 공자의 입장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실제로 맹자는 개인차원의 사리는 말할 것도 없고 국가차원의 공리마저 철저히 배척하고 나섰다. [고자 상]편의 해당대목이다.[21]

"지금 군주를 섬기는 자들이 '군주를 위해 토지를 개척하고 국고를 튼튼히

---

19) 羅世烈, [先秦時代諸子的義利觀]『四川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1988-1(1988), 93-94쪽 참조.

20) 『맹자』[양혜왕 상], "王, 何必曰利. 亦有仁義而已矣."

21) 『맹자』[고자 하], "今之事君者, 我能爲君辟土地充府庫. 今之所謂良臣, 古之所謂民賊也."

할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다. 요즘 이들을 두고 '양신(良臣)'으로 부르고 있으나 이들은 전에 '민적(民賊)'으로 불리던 자들이다."

토지를 개척하고 국고를 튼튼히 한다는 것은 '부국강병'을 뜻하는 것으로 곧 '국리'를 의미한다. 그럼에도 맹자는 '국리'를 좇는 자들을 싸잡아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는 '민적'으로 규정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이른바 '숭의척리(崇義斥利)' 입장에 해당한다. 맹자가 이처럼 강고한 '숭의척리'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유일하게 인정한 '리'는 '민리'였다. 이는 백성을 군주보다 중시하는 소위 '귀민경군(貴民輕君)' 사상에서 나온 것이다. 그는 양혜왕에게 이같이 권한 바 있다.[22]

"백성들에게 농사짓는 때만 어기지 않게 하면 양식은 다 먹을 수 없을 정도가 된다. 산 자를 봉양하고 죽은 자를 장사지내는데 아무 유감이 없게 될 때 왕도가 시작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가 공자 및 관중처럼 백성들이 풍족해야 예의염치를 알 수 있다는 식으로 언급하지 않은 점이다. 이는 그의 '항산항심(恒產恒心)' 주장을 검토하면 쉽게 알 수 있다. 『맹자』[양혜왕 상]편의 해당구절이다.[23]

"항산이 없으면서 항심을 지니는 것은 오직 선비만이 할 수 있다. 일반 백성은 항산이 없으면 항심을 지닐 수 없다."

맹자는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일반 백성들에게는 <항산 → 항심>의 논리를 적용하면서도 사대부들에게는 <무항산(無恒產) → 항심>의 논리를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고자 상]편에서 "성인도 나와 같은 부류이다"라고 호언한 맹자의 기본입장에 비춰 볼 때 상황이 허용될 경우 백성들에게도 <무항산 → 항심>의 논리를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중을 담고 있다.[24] 맹자의 '항산항심' 논리가 지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

22) 『맹자』[양혜왕 상], "不違農時, 穀不可勝食也...養生喪死無憾, 王道之始也."
23) 『맹자』[양혜왕 상], "無恒產而有恒心者, 惟士爲能. 若民, 則無恒產, 因無恒心."
24) 『맹자』[고자 상], "聖人與我同類者."

실제로 주희를 비롯한 성리학자들은 '항산항심'의 논리를 소위 '천리인욕설(天理人欲說)'에 입각해 해석하면서 현실화했다. 맹자의 이런 경직된 의리관은 그의 관중에 대한 평가에서 보다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그는 관중의 업적을 '의'가 아닌 '리'의 차원으로 해석하면서 이같이 평가절하 했다.[25]

"무력을 구사하며 인(仁)을 가장하는 자가 바로 패자이다."

'국리' 차원의 패업을 '의' 내지 '민리' 차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언지하에 폄하한 것이다. 공자가 '대의'로 평가한 관중 패업이 맹자에 의해 '불의'로 전락한 배경이 여기에 있다. 후대의 성리학자들이 맹자의 이런 입장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에 반해 순자는 '의'를 우선하면서도 '리'의 존재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소위 '선의후리(先義後利)'의 입장을 취했다. 그의 의리관은 '리'의 존재를 적극 용인하고 있는 점에서 오직 군자의 사리만을 배척한 공자의 의리관과 닮아 있다. 『순자』[영욕]편의 해당대목이다.[26]

"먼저 '의'를 내세우고 나중에 '리'를 찾는 자는 영예롭다. 그러나 '리'를 앞세우고 '의'를 뒤에 놓는 자는 욕을 당한다."

여기서 순자는 '의'를 앞세우는 '선의(先義)'를 적극 권하면서도 맹자처럼 '리'를 앞세우는 '선리(先利)'를 사갈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그가 왕도를 앞세우면서도 패도를 적극 수용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27]

"예를 높이고 어진 이를 등용하는 자는 '왕자(王者)', 법을 중시하고 인민을 사랑하는 자는 '패자(覇者)', 이익을 좋아하고 속임수가 많은 자는 '위자(危者)'이다."

그는 왕도가 가장 바람직하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때에는 패도 또

25) 『맹자』[공손추 상], "以力假仁者, 覇."
26) 『순자』[영욕], "先義而後利者, 榮. 先利而後義者, 辱."
27) 『순자』[대략], "君人者, 隆禮尊賢而王, 重法愛民而覇, 好利多詐而危."

한 무방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맹자가 왕도가 아닌 일체의 것을 패도로 폄척한 것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순자는 대의차원의 공리를 인정함으로써 맹자에 의해 곡해된 공자의 의리관을 복원시켰다고 할 수 있다.

한비자에 의해 집대성된 법가의 의리관은 인간의 본능은 본질적으로 먹고 입는 등의 생물적인 기본욕구에 매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누구를 막론하고 '리'를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28] 군자와 소인의 구별을 인정치 않는 배경이 여기에 있다. 맹자가 역설한 '인의' 등의 덕목에 대한 불신은 요순 등의 성군에 대한 폄하에서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29]

"옛날에는 사람이 적어서 서로 친하고 물자는 많았기 때문에 이익을 가벼이 여기고 쉽게 양보했다. 그래서 심지어는 천하마저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패도만을 유일한 치도로 간주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들의 의리관은 골육지친조차 사리추구에 따른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에서 출발하고 있다. 군주의 사리를 '국리'로 간주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30]

"필부의 사적인 영예는 군주의 큰 손해에 해당한다. 필부의 사적인 손해는 군주의 공리에 해당한다."

모든 인간관계는 결국 사리의 충돌과 타협일 수밖에 없다는 전제에서 나온 결론이다. 유가에서 말하는 일체의 '의'를 인정하지 않은 탓이다. 그런 점에서 오직 '민리'만을 인정한 맹자의 '숭의척리' 입장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는 일종의 '숭리척의(崇利斥義)'에 해당한다.

이상과 같은 검토를 통해 법가와 가장 대립된 위치에 서 있던 인물은 맹자

---

28) 인간은 '리'를 보면 '의'가 아닌 '리'를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는 법가의 입장은 『한비자』[해로], "人無毛羽, 不衣則不犯寒, 上不屬天而下不著地, 以腸胃爲根本, 不食則不能活. 是以不免於欲利之心." 및 『상군서』[군신], "民之欲富貴也, 共闔棺而後止." 구절 등에 잘 나타나 있다.

29) 『한비자』[팔설], "古者, 人寡而相親, 物多而輕利易讓. 故有揖讓而傳天下者."

30) 『한비자』[팔설], "匹夫之私譽, 人主之大敗也....匹夫之私毁, 人主之公利也."

였고, 군주의 사리만을 배제코자 한 공자의 의리관은 '선의후리'를 내세운 순자의 의리관과 가장 가깝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맹자는 '민리'를 제외한 일체의 '리'를 인정하지 않은 점에서 공자의 의리관을 크게 왜곡시킨 셈이다.

맹자의 의리관은 부강한 나라를 이룰 길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민리'의 구체적인 실현방안으로 제시한 '항산항심'이 백성들의 기아 해소 차원의 '부민(扶民)'에 그치고 있는 까닭이다. 그가 극히 이상적인 '정전제(井田制)'를 주장하며 부의 증진보다는 한정된 재화를 고르게 나누는 분배 문제에 무게를 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맹자는 '민리'를 소리 높여 외쳤음에도 그 내용만큼은 부실하기 짝이 없었던 셈이다.

세종시 논란에서 친이계는 '민신지변'에서 '민식'을 중시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국리'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는 공자 및 순자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친박계는 '하필왈리(何必曰利)' 운운하며 양혜왕을 질타한 맹자처럼 '리'보다 '의'를 앞세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부국강병의 논리에 비춰볼 때 재고를 요하는 대목이다.

III. 의리지변의 왜곡

1. 중리경의(重利輕義) 사례

역사를 개관하면 '리'를 중시하고 '의'를 가볍게 여긴 사례를 적잖이 찾아낼 수 있다. 아편전쟁 직전 청조 내부에서 일어난 소위 '이금론(弛禁論)'이 대표적인 실례이다. 당초 청제국은 건국 이후 오직 광동의 성도인 광주(廣州)에서만 대외무역을 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영국은 이를 통상적인 대외무역으로 생각했으나 청조는 전래의 조공무역으로 파악했다. 외국상인이 청국의 명령에 순응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통상을 정지할 수 있다는 게 청조

의 기본 입장이었다. 도광 11년(1831)에 공포된 [외이방범장정(外夷防範章程)]이 그 증거이다. 대부분 영국 상인들로 이뤄진 외국상인들은 광동성 외곽에 마련된 '13항가(行街)'에서만 거주할 수 있고, 청국정부와 접촉하고 싶을 때는 민간기업 연합회인 '콩홍(公行)'에 일종의 신고서에 해당하는 '품(稟)'을 제출해야만 했다. 콩홍은 이를 감독기관인 해관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으나 전달 여부는 콩홍의 재량이었다. 한쪽은 조공무역, 다른 한쪽은 국제무역으로 간주해 빚어진 기묘한 교역관계였다.

원래 청국과 영국 간 무역의 최고 교역품은 차였다. 차는 18세기에 들어와 생사를 능가해 대영 수출의 최대 품목이 되었다. 1785년부터 1833년까지 전체 수출품의 93%에 달했다. 18세기말 영국의 평균 차 수입액은 매년 400만 량 전후로 영국 상인이 청국에 수출한 모직물과 금속, 면화 등 3대 상품을 상쇄할 정도였다. 당시 영국은 연이은 대외전쟁에 따른 재정 부담으로 인해 차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수요의 증가에 따른 공급의 부족으로 인해 차의 밀수입이 극성했다. 1784년 세율을 대폭 낮추자 밀수는 격감했으나 음다(飮茶) 풍습이 더욱 보편화돼 오히려 차의 수입을 더욱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1820년 당시 수입량은 3,000만 파운드에 달했다.

당시 영국이 청국에 수출한 품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모직물이었다. 18세기 말 모직물 수출량은 1,520만 냥으로 영국 본토로부터의 총 수출량의 85%에 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모직물은 중국인에게 사치품에 속했고, 추운 지역의 부유한 사람도 대부분 실크와 털옷을 입어 수출에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178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인도면화가 모직물을 누르고 대청무역의 수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인도면화는 동인도회사가 차 구매자금을 얻기 위해 고안해 낸 상품이었다. 그럼에도 차의 교역량이 워낙 컸던 까닭에 차의 수출액이 1785년에서 1833년까지 매년 150-300만 량 가량 웃돌았다. 무역적자에 시달리는 영국은 은을 지불하지 않고 차를 수입하는 방안을 다시 다각도로 모색했다. 아편은 바로 이 와중에 인도면화를 대신해 무역적자를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기획 상품의 일원으로 등장한 것이었다.[31]

원래 아편의 흡식(吸食)은 동인도 제도에 거주하던 네덜란드인이 말라리아를 예방키 위해 담배 속에 섞어 피운데서 비롯되었다. 이것이 18세기 말 청국에 소개된 이후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아편 흡식에 대한 최초의 금령은 옹정 9년(1729)에 내려졌다. 이후 아편전쟁 직전인 1839년까지 판매금지, 수입금지, 양귀비 재배 금지, 흡식기구 제조금지 등과 관련한 조칙이 40여 차례 나왔다. 금령이 잦은 것은 그만큼 효과가 없었음을 반증한다. 실제로 광동과 복건 등 일부 해안지역에 한해 유포되었던 아편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내륙으로 확산되어 전쟁 직전에는 마침내 멀리 만주의 심양 지역까지 퍼지게 되었다. 계층 별로 볼 때도 처음에는 상류 유한계층에 한정되었으나 이후 북경의 황족과 궁궐의 환관에 이어 쿠리나 농민 등의 빈민층, 심지어 부녀자와 승려에까지 미치게 되었다. 1830년 후반 아편중독자수는 전국적으로 최소한 200만 명에 달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편 흡식은 병사들의 전투능력을 현격히 떨어뜨렸고, 농촌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갔다. 아편 밀매의 성행으로 인한 은(銀)의 대량 유출을 뜻하는 소위 '누은(漏銀)'은 더욱 심각했다. '누은'은 동전의 가치를 폭락시켰고, 이는 다시 농민들의 세 부담을 가중시켰다. 19세기 초까지 은 1량에 동전 1,000문(文) 하던 것이 아편전쟁 직전에 이르면 2배 가까이 치솟았다. 은으로 세금을 납부하던 염상(鹽商)이 대거 파산하자 이는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32] 청국도 가부간 결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와중에 터져 나온 것이 바로 '이금론'이다.

이는 호광도(湖廣道) 감찰어사로 있는 왕붕(王玥)이 도광 16년(1836) 5월에 상소를 올리면서 처음으로 표면화했다. 골자인 즉 아편의 흡음은 기본적으로

---

31) 당시 영국과 청국 간의 무역 내용에 대해서는 표교열, [제1-2차 중영전쟁]『강좌중국사』5 (지식산업사, 1993), 27-29쪽 참조.

32) 표교열, 상게서 31쪽.

자업자득인 까닭에 나라가 나설 필요가 없으나 군내에 아편이 유행하는 것만 엄금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1달 뒤 태상시(太常寺)의 소경(少卿) 허내제(許乃濟)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다. 그는 상소문에서 현실적으로 아편을 금할 수 없다면 수입세를 징수하는 게 좋다는 논지 하에 양귀비 재배 금지도 해제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파격적인 주장을 폈다.[33]

"아편밀수가 엄금 이후 오히려 더욱 심해졌습니다. 차라리 아편에 약재 등에 부과하는 세금을 매겨 이상(夷商)에게 납부케 하고, 통관 후에는 은을 쓰지 않는 이화역화(以貨易貨: 물물교환)로 교역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양은(洋銀: 멕시코 은화 등)과 문은(紋銀: 청국 발행 은화) 모두 일률적으로 유출을 금해야 할 것입니다."

허내제는 중앙으로 올라오기 전에 광동 안찰사(按察使) 등을 역임한 까닭에 아편의 본고장인 광동의 실정에 밝았다. 아편의 밀수를 근절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던 그는 나름대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한 셈이다. 당시 밀수량은 이미 2만 상자를 넘고 있었다. 이는 120만 톤에 달하는 양이었다. 도광제는 곧 허내제의 상소문 사본을 광동 현지로 보내 당국자의 의견을 물었다. 양광총독 등정정(鄧廷楨)과 광동순무 기공(祁墳) 등은 '이금론'에 찬동하는 내용의 주문(奏文)을 올렸다.

"은을 사용하지 않는 '이화역화'에 의한 교역을 합니다. 결제 때 초과분 역시 은으로 지불하지 않고 다음 계정으로 이월해야 합니다. 수사(水師)는 단속을 빙자해 바다로 나가 사단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민간의 양귀비 재배는 산꼭대기나 사면의 계단식 밭 등에 한해 허용하면 될 것입니다."

국가 관할 하의 아편 재배를 주장한 이들의 답변을 소위 '광동복주(廣東覆奏)'라고 한다. '광동복주'는 전혀 터무니없는 것도 아니었다. 당시 아편의 밀수량의 증가와 더불어 양귀비의 은밀한 재배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었다. 약용과 기호품을 엄히 구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 '광동복주'의 사실을

33) 표교열, 상게서 36쪽.

접한 외국상인들은 아편 금수가 조만간 해제되리라는 기대에 부풀었다.

그러나 문제가 그리 간단치 않았다. 역대 최고의 성군이 될 생각으로 도학(道學)에 심취해 있던 도광제는 황제의 명예를 걸고 이를 근절시킬 생각이었다. 여기에는 예부시랑 주준(朱嶟) 등이 '이금론'과 대립되는 소위 '엄금론(嚴禁論)'을 전개하며 도광제를 부추기고 나선 게 크게 작용했다. 이들이 올린 상소문의 골자이다.

"아편을 백성에게는 허용하고 관과 군에만 금한다고 하면 관원이나 병사는 백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사람을 해치는 독물임을 알면서도 그 유통을 허락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의로운 천조(天朝)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 당시 이금론은 '누은'의 경제문제에만 지나치게 집착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웠다. 강남도어사 원옥린(袁玉麟)이 이금론의 맹점을 조목조목 논박하는 상소를 올렸다.

"아편에 관세를 물릴지라도 1백만 냥도 안 될 뿐 아니라 소리(小利)를 위해 대체(大體)를 손상하는 일이 됩니다. 은을 사용하지 않는 '이화역화' 역시 실효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아편이 들어오는 것은 은을 원하기 때문이니 은을 몰래 결제에 사용되는 상황에서 이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준과 원옥린 등이 상주한 '엄금론'은 구체적인 방안이 결여 되어 있었다. 청조가 '광동복주' 이후 2년 가까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이는 아편밀매에 종사하는 외국상인들의 기대를 더욱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국가존망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현안을 앞에 두고 조정이 주저하며 유예한 것이 아편전쟁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 셈이다. 도광 18년(1838) 5월에 마침내 홍려시경(鴻臚寺卿) 황작자(黃爵滋)가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상소문을 제출했다. 제1차 아편전쟁의 주인공인 임칙서는 황작자의 엄금론에 동조하는 지방독무 중 가장 강력한 입장을 피력한 인물이었다.

원래 '이금론'을 주장한 사람들 역시 성리학의 세례를 받은 까닭에 '의'와

'리'의 우선순위에서 '의'를 앞세우는 인물들이었다. 정반대로 가장 강력한 엄금론을 내세운 임칙서 역시 '의'를 '리'보다 앞세웠지만 아편 이외의 물품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문호를 개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양측의 입장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던 게 아니었다. 그럼에도 조정에서 '이금론'과 '엄금론'이 충돌케 된 것은 그만큼 상황이 절박했기 때문이다.

당시 상황에 비춰 '이금론'은 나름대로 위기국면을 타개키 위한 고육책으로 제시된 것이기는 했으나 타당성을 지니기 어려웠다. 아편 밀매의 이면에는 청국 관원이 아편 밀매상과 한 통속이 되어 뇌물을 챙기며 밀매를 눈감아주는 커넥션이 작동하고 있었다. 실제로 아편을 단속하는 광동의 '월해관감독(粵海關監督)'은 통상 밀매상들로부터 매년 10만-30만 량의 뇌물을 챙겼다. 아편무역은 외양만 밀무역이었을 뿐 공공연한 자유무역이나 다름없었다. '이금론'은 근원적인 처방을 외면한 채 오히려 관원들의 비리와 부패를 더욱 조장할 소지가 컸다. '의'를 무시한 채 '리'를 앞세웠다가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2. 중의경리(重義輕利) 사례

조선조는 병자호란 당시 '이금론'과는 정반대되는 입장에서 '의'를 앞세우며 '리'를 배제한 소위 '척화론'을 전개한 바 있다. 이는 맹자가 설령 국가의 존망과 관련된 '국리'일지라도 결코 '의'를 해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것과 닮아 있다. 병자호란이 일어나기 1달 전 척화파의 우두머리인 김상헌의 일가인 윤집이 올린 상소가 그 증거이다.[34]

"명나라는 우리나라에게 곧 부모이고, 오랑캐는 우리에게 곧 부모의 원수입

34) 『인조실록』[14년(1636) 11월 8일], "天朝之於我國, 乃父母也. 奴賊之於我國, 卽父母之仇讐也。爲人臣子者, 其可與父母之仇讐. 約爲兄弟, 而置父母於相忘之域乎....頃者虜勢張甚, 逼近京師, 震汚皇陵, 殿下於斯時也, 當作何如懷耶. 寧以國斃, 義不可苟全, 而顧兵弱力微, 未能悉賦從征, 亦何忍更以和議, 倡於此時乎."

니다. 신하된 자로서 부모의 원수와 형제가 되어 부모를 저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지난번 오랑캐의 형세가 크게 확장하여 경사(京師: 북경)를 핍박하고 황릉(皇陵)을 더럽혔을 때 전하는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차라리 나라가 망할지언정 의리상 구차스럽게 생명을 보전할 수 없다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비록 병력이 미약한 탓에 전군을 출병시켜 오랑캐 정벌에 나서지는 못했을지라도 어찌 차마 이런 시기에 다시 화의를 제창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나라가 패망하고 백성이 어육이 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에서 '나라가 없어질지언정 명에 대한 충성을 저버릴 수 없다'는 식의 논리를 전개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군주는 물론 나라와 백성조차 안중에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는 오랑캐인 만주족이 중원의 주인이 되는 것만큼은 하늘이 무너져도 인정할 수 없다는 고루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겉만 '의'였을 뿐 그 내용은 편벽된 아집에 지나지 않았다. 남한산성으로 들어가 독안의 쥐 신세가 되어 있을 당시에도 척화파인 이조참판 정온은 주화파인 최명길을 겨냥해 이런 내용의 상소를 올렸다.[35]

"하늘에는 두 개의 태양이 없는 법인데 최명길은 두 개의 태양을 만들려 하고, 백성들에게는 두 임금이 없는 법인데 최명길은 두 임금을 만들려 합니다. 신은 몸이 병들고 힘이 약하여 비록 수판(手板)으로 그를 후려칠 수는 없을지라도 같은 자리에 앉아 서로 용납하는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원래 『서경』과 『역경』 등 유가경전이 하나같이 강조하는 것은 소위 '천도무친(天道無親)'과 '천명무상(天命無常)'이다. 하늘은 특별히 누구를 돕거나 해치는 바가 없다. 오직 스스로 노력하여 덕을 쌓는 자에게 천명이 돌아갈 뿐이다. 누구라도 성인을 모범으로 삼아 덕을 열심히 쌓으면 능히 천하의 제왕이 될 수 있는 법이다. 중원의 주인이 반드시 한족이어야 한다는 원칙이 존재할

35) 『인조실록』[15년 1월 19일], " 天無二日, 而鳴吉欲二其日. 民無二主, 而鳴吉欲二其主. 是可忍也, 孰不可忍. 臣身病力弱, 雖不能以手板擊之, 而不欲相容於同席之間.伏願殿下, 痛斥鳴吉之言, 以正賣國之罪."

리 없다. 훗날 청조의 옹정제는 『대의각미록』에서 중화와 오랑캐는 상대적인 개념일 뿐이고, 만주족도 덕을 쌓으면 얼마든지 중원의 황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고전을 인용해 논리적으로 증명한 바 있다. 황제가 되는 것은 종족 내지 민족 단위의 혈연에 토대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적덕(積德)의 유무에 달려 있다는 게 골자였다.

인조를 포함한 조선의 군신들이 남한산성에 들어가 결사항전을 외친 것은 명나라의 천명만이 영원히 계속될 것으로 내다본 결과였다. 당시 명나라는 조선 측의 급보를 받았으나 구원에 나설 입장이 못 되었다. 그럼에도 인조를 비롯한 조선의 군신은 명나라 원군이 달려와 포위를 풀어주거나, 최소한 청의 배후를 찔러 포위가 저절로 풀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연목구어의 헛된 희망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당시 조선이 청과의 일전을 염두에 두고 특별히 대비책을 강구해 놓은 것도 아니었다. 오직 압록강 일대를 지키고 있는 임경업에게 모든 것을 맡겨 놓았을 뿐이다. '의'를 지나치게 앞세운 조선성리학의 과도한 명분론이 자초한 무책(無策)의 극치였다.

더 큰 문제는 '삼전도의 굴욕' 이후 조선의 군신이 보여준 편협한 자세였다. 효종 즉위 직후 조선의 군신은 명나라가 임진왜란 때 베푼 은혜에 보답하고 삼전도의 치욕을 씻자는 취지의 '숭명배청(崇明排淸)' 여론에 올라타 소위 '북벌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전세의 역전을 기대하며 명나라의 잔당과 합세해 청의 배후를 치고자 한 것이다. 효종은 '숭명배청'의 진원지로 이름이 높은 호서 지역의 사민들을 대거 징병했다. 당시 호서 지역에는 김장생의 문인인 김집과 송시열, 송준길 등이 포진하고 있었다. 송시열은 일찍이 효종이 봉림대군으로 있던 시절 사부로 재직한 바 있다. 이들은 효종의 '북벌론'에 적극 찬동하고 나섰다.

당시 중앙 정계는 경화사족(京華士族)으로 구성된 한당(漢黨: 한양 일대를 근거지로 삼은 붕당)이 장악하고 있었다. 한당이 산당(山黨: 산림 속에 묻혀 있는 호서지역 붕당)의 공허한 '북벌론'을 집중 성토하는 것을 계기로 산당이

이내 낙향하는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북벌론'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막대한 재정 부담을 이유로 내건 한당의 강력 반대에도 불구하고 군비 확장과 진법 연구, 병기 개량, 산성 수축 등이 대대적으로 진행되었다.

이후 청조의 정세가 안정세로 접어들면서 북벌의 열기가 식어 가자 효종은 다시 송시열을 끌어들여 이를 고양시키고자 했다. 향리에서 정국의 추이를 관망하던 송시열은 효종 9년(1658) 김육의 사망을 계기로 다시 정치 일선에 복귀했다. 그러나 이듬해인 효종 10년(1659)에 명나라 부흥의 마지막 희망인 영명왕이 미얀마로 도주하면서 명나라 부흥운동은 사실상 끝나고 말았다. 이 해에 북벌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쏟던 효종도 송시열과 독대를 가진 지 두 달 만에 급서하고 말았다. 이후 현종과 숙종의 재위기간 중 정국을 주도해 나간 산당의 영수 송시열은 시종 '숭명배청'의 여론을 주도하면서 비현실적인 명분론을 부추겼다. 숙종 13년(1687)에 올린 상소가 그 증거이다.[36]

"임진년의 난리를 당해 팔도가 탕진되고 온 나라 민생이 어육(魚肉)이 되었을 때 다행히 황상(皇上: 만력제)이 이를 듣고 발끈 화를 내자 추왜(醜倭)들이 패주했습니다. 무릇 우리나라는 한 가지 털끝만한 것에서부터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에 이르기까지 황상의 덕을 입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비록 무식한 상놈일지라도 모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죽도록 보답하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물며 우리 선조(宣祖) 대왕이 은혜를 생각하고 덕에 감사하며 힘을 다해 보답하려고 생각하심이 어떠했겠습니까."

조선조가 왜란과 호란 이후 내리 쇠망의 길을 걷다가 끝내 패망케 된 데에는 군신이 이처럼 극단적인 명분론에 함몰된 사실과 무관치 않았다. 조선의 사대부들은 나라의 존망과 관련된 '국리'조차 '의'를 앞설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윤집 등이 상소문에서 '차라리 나라가 망할지언정' 운운한 게 그 증거

36) 『숙종실록』[13년 2월 4일], "至于壬辰之亂, 八路蕩殘, 一國生靈, 皆爲魚肉矣. 幸賴皇上爰赫斯怒, 動天下之兵, 竭天下之財, 天威震疊, 凶醜敗還..... 凡我東一毫一髮, 一草一木, 無非帝德攸霑, 雖無知常漢, 皆思感泣死報. 況我宣廟所以銜恩感德, 思所報效者, 如何哉."

이다.

명나라가 왜란 때 조선을 도와준데 따른 소위 '재조지은(再造之恩)'도 국가의 존망과 관련된 이익과 충돌할 때에는 '국리' 앞에 우선순위를 내주는 게 도리이다. 6.25때 미국이 도와준 것도 이런 차원에서 논할 수 있다. 아무리 국가 차원의 신의가 중요할지라도 그것이 '국리'보다 앞설 수는 없는 일이다. 이것이 고금을 막론하고 국제관계를 관통한 불변의 통의(通義)였다.

초한전 당시 유방이 항우와 홍구(鴻溝)에서 천하를 양분하는 맹약을 맺은 후 곧바로 장량의 계책을 좇아 항우의 군사를 격파하고 천하를 거머쥔 게 그 실례이다. 이에 반해 구한말에 조선의 군신은 미국이 일본과 밀약을 맺은 사실도 눈치 채지 못한 채 허울뿐인 한미수호조약에 목을 매며 미국 측에 일제 침략의 저지에 나서줄 것을 호소한 바 있다. 세종시 논란에서 친박계가 '신의'를 내세우며 상대방을 매도하는 것은 호란 당시의 척화파와 구한말 조선조 군신의 행태를 연상케 만든다. 바람직한 수정안이 나올 경우 이를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할 줄 아는 유연성과 아량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IV. 전망과 해법

원래 세종시 탄생은 '국토균형발전' 운운의 명분보다는 사실 영호남이 정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충청지역을 장기집권을 위한 든든한 기반으로 삼고자 하는 참여정부의 정략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원안추진을 공약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충청지역민이 친이계의 원안변경 움직임에 반발하는 것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참여정부의 통치철학을 승계한 민주당과 충청권 기반의 자유선진당이 반발하는 것 역시 양해될 수 있다. 문제는 '친박계'의 행보이다.

현재 그 배경과 관련해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원안수정을 추인할 경우 신의와 원칙을 내세우며 '세종시법' 통과에 일조한 박 전 대표의 명성에 큰

흠집이 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견해부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천도계획'을 시도한 점 등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견해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가장 그럴 듯한 것은 여권 내 차기 대권구도와 관련한 복잡한 셈법의 일환으로 평가하는 견해이다.

실제로 현 정부의 집권2기 간판으로 전격 발탁된 정운찬 총리는 이번 세종시 논란에서 친이계의 선봉장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박 전 대표의 유력한 대항마로 부상했다. 이 대통령이 이를 염두에 두고 그를 논란의 전면에 내세웠다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다. 이런 추론이 맞는다면 박 전 대표는 소위 '원안+α'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오히려 자충수를 둔 셈이 된다. 최소한 이번 일로 인해 여권 내 차기대권 구도에 적잖은 변화가 초래될 공산이 커진 것만은 사실이다.

여권 내부의 복잡한 대권구도와는 별개로 정작 문제는 이번 논란이 국론분열 불씨로 작용할 조짐을 보이는데 있다. 최근 4대강사업을 둘러싼 여야 간의 공방전이 더해지면서 원안수정을 둘러싼 찬반양론의 예각은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다. 객관적으로 볼 때 더 이상 소모적인 논란을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신식지변' 및 '의리지변'을 동원해 논란을 일거에 종식시킬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선 이 대통령과 정부, 친이계는 '민신'에 초점을 맞춘 야권 및 친박계의 비난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중간평가'와 '내각제개헌' 등의 전례가 있음에도 유독 원안추진 공약만 문제 삼는 것은 의도적이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기 때문이다. 득국술(得國術)의 일환으로 나온 '식언'을 두고 신의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은 스스로 과도한 명분론에 갇힐 소지가 크다. 오히려 주의할 것은 치국술(治國術)의 일환으로 구사하는 식언이다. 이는 공자가 갈파했듯이 <민무신 → 국불립>의 패망을 자초하는 길이다.

둘째, 정부와 친이계는 머리를 맞대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뛰어난 대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신식지변'의 관점

에서 볼 때 21세기의 치열한 경제전쟁 상황에서 '민신'이 '민식'보다 앞설 수는 없는 일이다. 참여정부가 '천도' 차원에서 세종시를 만들어낸 만큼 이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 정부 역시 비록 '득국술'의 일환으로 원안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운 전과가 있는 만큼 국가존망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 기존의 행정복합도시를 갈음할 수 있는 수준의 뛰어난 대안을 만들어내야 하는 이유이다. 해답은 '민식'의 중요성을 능히 납득시킬 수 있는 뛰어난 대안에 있다. 해당지역민은 물론 일반 국민들도 놀랄 정도의 높은 수준이어야만 한다. 단지 몇 개의 기업과 대학의 연구소를 이전하는 식의 형식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임시처방으로는 오히려 해당 지역민을 비롯해 친박계 및 야권의 반발 수위만을 높일 뿐이다.

셋째, 이 대통령은 보다 분명하면서도 당당한 자세로 원안수정을 위한 대국민설득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의리지변'의 관점에서 볼 때 최고통치권자인 이 대통령이 '국리'를 내세워 직접 설득에 나서야만 논란을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08년의 촛불정국 당시 '우유부단'으로 인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전례를 감계로 삼아야 한다. 참여정부는 '우유부단'과 정반대되는 '독선'으로 국론을 분열시킨 바 있다. 세종시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최고통치권자에게 '우유부단'은 '독선'보다 더 위험하다. 이번 논란은 친박계가 차기대권구도를 다지는 차원에서 결사저지에 나서고 있는 만큼 이 대통령이 앞에 나서 정면 돌파를 시도하지 않을 경우 촛불정국 때보다 더 큰 화를 자초할 공산이 크다.

<접수일: 2009. 10. 15, 심사일: 2009. 10. 29, 게재확정일: 2009. 11. 8>

초 록

세종시 논란과 의리지변(義利之辨)

신 동 준

2009년 말 정국이 세종시 논란으로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논란은 여야 대립의 차원을 넘어 여권의 내홍으로 번지고 있다. 원래 세종시 논란의 씨앗은 참여정부 때 뿌려졌다. 당시 참여정부는 '천도계획'의 복안을 실천에 옮기고자 했으나 이내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좌절되자 그 대안으로 '세종시법'을 통과시켰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서울시장 재직 시절 이를 강력 반대했던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후보가 된 후 충청지역민에게 원안추진을 공약했다. 이제 와서 원안수정을 추진하는 것은 면목 없는 일이다.

그러나 보다 나은 대안을 찾고자 하는 것을 두고 '공약이행' 운운하며 원안추진을 고집할 수만도 없는 일이다. 이전의 정부들도 '중간평가' 및 '내각제개헌' 등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다가 집권 이후 상황논리를 들어 이를 폐기한 바 있다. 현 정부만 유독 비난의 대상이 된 데에는 참여정부의 정략적 속셈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겉으로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그 속셈은 영호남 대립구도 속에서 충청지역을 장기집권의 지렛대로 삼으려 한 데 있었기 때문이다.

세종시 논란은 선진시대 때 제기된 소위 '신식지변(信食之辨)' 내지 '의리지변(義利之辨)'을 동원해 그 해법을 찾아낼 수 있다. '신식지변'은 백성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인 '민식(民食)'과 위정자에 대한 신뢰인 '민신(民信)'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를 둘러싼 논변을 말한다. '의리지변'은 과연 위정자에게 약속을 지키는 '신의(信義)'와 국가 전체의 이익을 뜻하는 '국리(國利)'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를 둘러싼 논변을 말한다. 사상사적으로 '민식' 및 '국리'는

패도(覇道), '민신' 및 '신의'는 왕도(王道)에 해당한다.

현재 세종시 논란은 여권 내부의 차기대권구도 및 4대강 살리기 작업과 뒤엉켜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의리지변'의 관점에서 볼 때 세종시 논란의 유일한 해법은 정부의 조속한 대안 마련과 대통령의 정면 돌파에 있다. 이는 국가 존망 및 성쇠의 관건이 통상 '민의' 및 '의리'보다는 '민식' 및 '국리'에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것이다.

주제어: 신식지변, 의리지변, 민식, 민신, 신의, 국리, 왕도, 패도

Abstract

Sejong City and 'Yili-debate'

Shin, Dong Jun

The government's intent to change the original plan for Sejong City has not only driven the political parties into a vehement dispute, but also made a deep cleavage even in the governing party. The contending point primarily concerns whether to keep the original plan or not. President Lee ordered the new prime minister Chung to come up with an alternative plan that puts national interests before anything else. It is argued that the necessity of changing the original plan is a matter of national interest and overrides that of faithfully keeping it. But, for Park, who is one of the most influential in the governing party, the issue is not a matter of interest, but that of trust.

The special law on Sejong City passed in 2005, when Park was then the head of an opposition party. Park has kept a consistent position that the law should be implemented as it is, preferably, with additional auxiliary facilities. Her position is more rigid than those of opposition parties. And it is assumed that the antagonism of Park and her followers against Chung is more poignant by the fact he may become one of latent challengers in the 2012 presidential election. For this reason, the intra-party conflict is likely to be aggravated day after day. It seems that President Lee follows the Pae-do(power-oriented government), whereas Park the Wang-do(the righteous government).

Political leaders cannot help confronting the conflict between Wang-do and Pae-do, whenever trust and national interest collide against each other.

'Yili-dabate', a theory of which to choose between trust and national interest, will help us to find out a solution over that issue. As a conclusion, it can be argued that President Lee should take the initiative on the issue in an open manner to put an end to an endless dispute. Historical evidence universally shows that wise leaders, faithfully following the 'Yili-logic', have chosen national interest in lieu of trust, without hesitation or equivocation.

key wards: 'Yili-logic', justice, national interest. Wang-do, Pae-do,

참고문헌

1. 기본서

『논어』, 『맹자』,『순자』, 『관자』, 『한비자』, 『춘추좌전』, 『자치통감』, 『전국책』, 『국어』, 『삼국지』, 『송명신언행록』,『송사』, 『명사』, 『청사고』, 『조선왕조실록』.

2. 한국어

강주진, 1971, 『이조 당쟁사 연구』, 서울대출판부.
김 돈, 2001, "조선 중기의 반정과 왕권의 위상", 『서울시립대전농사론 7』.
김동택, 2000, "19세기말 근대국가 건설 과정에서 나타난 정치적 균열", 『한국정치학회보 34-4』.
김충남, 1998, 『성공한 대통령 실패한 대통령』, 둥지.
김한식, 1979, 『실학의 정치사상』, 일지사.
김혜승, 1990, 『원시유교』, 민음사.
라이샤워 외, 1973, 『동양문화사』, 을유문화사.
모리야 히로시, 이찬도 옮김, 1991, 『중국 고전의 인간학』, 을지서적.
박찬욱 외, 1997, 『미래 한국의 정치적 리더십』, 미래인력연구센터.
박충석, 1982, 『한국 정치사상사』, 삼영사.
서울대동양사학연구실 편, 1989, 『강좌 중국사 1~7』, 지식산업사.
슈월츠, 나성 역, 1996, 『중국고대사상의 세계』, 살림출판사.
신동준, 2007, 『조선의 왕과 신하, 부국강병을 논하다』, 살림출판사.
안 확, 1923, 『조선 문명사』, 회동서관.
오까모도 류조, 배효용 역, 1985, 『한비자 제왕학』, 예맥.
이성규 외, 1993, 『동아사상의 왕권』, 한울아카데미.

이성무, 2000,『조선 시대 당쟁사』, 동방미디어.
전 목, 1990, 권중달 역,『중국사의 새로운 이해』, 집문당.
최 명, 2004,『춘추전국의 정치사상』, 박영사.
최창규, 1972,『근대 한국 정치사상사』, 일조각.
펑여우란, 정인재 옮김, 1995,『중국철학사』, 형설출판사.
플라톤, 박종혁 옮김, 1997,『국가 · 정체』, 서광사.
한국공자학회 편, 1986,『공자사상과 현대』, 사사연.
한국사연구회, 1995,『근대 국민국가와 민족 문제』, 지식산업사.
황원구, 1988,『중국사상의 원류』, 연대출판부.

3. 중일

徐復觀, 1951,『中國思想史論集』, 臺中印刷社.
蕭公權, 1980,『中國政治思想史』, 臺北聯經出版事業公司.
梁啓超, 1926,『先秦政治思想史』, 商務印書館.
吳辰佰, 1997,『皇權與紳權』, 儲安平.
劉澤華, 1984,『先秦政治思想史』, 南開大學出版社.
李宗吾, 1990,『厚黑學』, 求實出版社.
李澤厚, 1985,『中國古代思想史論』, 人民出版社.
張君勱, 1984,『中國專制君主政制之評議』, 弘文館出版社.
張岱年, 1989,『中華的智慧-中國古代哲學思想精髓』, 上海人民出版社.
周燕謀 編, 1976,『治學通鑑』, 臺北, 精益書局.
黃偉合, “從西周到春秋“義利”思想的發展軌迹”『學術月刊』 1990-1(1990).
顧頡剛 著 小倉芳彦 等 譯, 1978,『中國古代の學術と政治』, 大修館書店.
溝口雄三, 1995,『中國の公と私』, 研文出版.
宮崎市定, 1984,『アジア史研究, I-V』, 同朋社.

金谷 治, 1987,『管子の研究-中國古代思想史の一面』, 岩波書店.
渡邊信一郎, 1994,『中國古代國家の思想構造』, 校倉書房.
木村英一, 1984,『孔子と論語』, 創文社.
福澤諭吉, 1989,『福澤諭吉選集』, 岩波書店.
守本順一郎, 1967,『東洋政治思想史研究』, 未來社.
狩野直禎, 1987,『韓非子の知慧』, 講談社.
安岡正篤, 1986,『東洋學發掘』, 明德出版社.
日原利國, 1987,『中國思想史, 上,下』, ペリカン社.
津田左右吉, 1987,『左傳の思想史的研究』, 東京, 岩波書店.
貝塚茂樹 編, 1982,『諸子百家』, 筑摩書房.
丸山松幸, 1975,『異端と正統』, 每日新聞社.
丸山眞男, 1993,『日本政治思想史研究』, 東京大出版會.

4. 서양

Ahern, E. M., 1981, *Chinese Ritual and Politics*, Cambridge Univ. Press.
Allinson, R., ed., 1989, *Understanding the Chinese Mind: The Philosophical Roots*, Hong Kong: Oxford Univ. Press.
Ames, R. T., 1983, *The Art of Rulership - A Study in Ancient Chinese Political Thought*, Honolulu: Univ. Press of Hawaii.
Cohen, P. A., 1974, *Between Tradition and Modernity: Wang T'ao and Reform in Late Ch'ing China*,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Creel, H. G., Shen Pu-hai. 1975, *A Chinese Political Philosopher of The Fourth Century B.C.*,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Cua, A. S., 1985, *Ethical Argumentation - A study in Hsün Tzu's Moral Epistemology*, Univ. Press of Hawaii.

De Bary, W. T., 1991, *The Trouble with Confucianism*, Cambridge, Mass. Harvard Univ. Press.

Fingarette, H., 1972, *Confucius: The Secular as Sacred*, New York: Harper and Row.

Hsü, L. S., 1932, *Political Philosophy of Confucianism*, London: George Routledge & Sons.

Rubin, V. A., 1976, *Individual and State in Ancient China - Essays on Four Chinese Philosophers*, Columbia Univ. Press.

Schwartz, B. I., 1985, *The World of Thought in Ancient China*,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Tu, Wei-ming, Way, 1993, *Learning and Politics- Essays on the Confucian Intellectual*, Albany, State Univ. of New York Press.

Waley, A., 1956, *Three Ways of Thought in Ancient China*, doubleday & company.